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간담회

일 시: 2017년 11월 1일 (수) 오후 2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금태섭,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주 관: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외국인이주 · 노동운동협의회,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외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he UN Migration Agency
유엔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간담회

2017년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

목 차

- ∞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개괄 및 협의 일정/ 2~3
- ∞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권고사안』/ 4~15
- ∞ [부록] 주제별 협의 결과 요약정리/ 16~36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GCM)

개괄

2016년 9월 19일 열린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정상회담(United Nations Summit for Refugees and Migrants)'에 모인 193개 유엔 회원국은 '난민과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and Migration, 글로벌컴팩트)'를 2018년 유엔 총회까지 완성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위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뉴욕선언(New York Declaration)'에서는, 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국제사회,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게 될 최초의 국제 문서인 글로벌컴팩트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GCM)는 최종적으로 국가 간 합의문의 형태를 취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이주 문제에 대한 공통의 원칙과 접근 방법의 확립,
2. 취약상태에 처한 이주자에 대한 국가, 지역,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에 관한 기본 지침,
3. (이주 문제, 이주 위기 등에 대한) 책임의 동등한 분담을 위한 협의 및 협조체계 관련 논의 등.

2017년 11월 1일 현재, GCM 초안 작성을 위한 **주제별 정부간 협의(Thematic Consultations)**는 **전체 6차 회의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제까지 열린 1~6차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간략한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각 정부 입장서 및 주제별 회의 결과는 **올해 12월 초 멕시코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문건, draft Global Compact for Migration(초안)으로 정리될 예정**이며, 각 국 정부 대표는 2018년 2월~7월 기간 동안 해당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이주에 관한 현안의 범위가 넓고 그 종류가 다양하여 각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고루 반영될 때에만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를 위한 국가·지역·국제 거버넌스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간 협의와 병행하여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4일~5일, 방콕에서 열렸던 아태지역 시민사회단체 간 협의 외에도 다음 페이지에 정리된 것과 같은 일정으로 지역·국제사회 차원 협의가 진행되었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국가, 지역, 국제사회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게 될 정책, 프로그램,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례는 현재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만 존재하는 이주 거버넌스(migration governance)의 운용 등에서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GCM 관련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IOM 한국대표부가 방콕 아태지역본부, 제네바 본부 및 뉴욕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Migration)에 전달하여 GCM 초안 작성을 위한 12월 협의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안 작성을 위한 국가, 지역차원의 협의 일정

일정	장소	일시
정부간 주제별 협의(총 6 차)		
제 1 차: 모든 이주자의 인권보호, 모든 종류 차별 철폐	UN/제네바	2017.5.8~9
제 2 차: 이주의 배경원인	UN/뉴욕	2017.5.22~23
제 3 차: 이주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UN/제네바	2017.6.19~20
제 4 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주자 및 디아스포라의 기여	UN/뉴욕	2017.7.24~25
제 5 차: 밀입국,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 피해이주자 보호와 지원	UN/비엔나	2017.9.4~5
제 6 차: 비정규이주와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전반의 문제	UN/제네바	2017.10.12~13
지역 협의 - 정부, 비정부 행위자, 국제기구		
아프리카 지역협의 (ECA)	아디스아바바	2017.9.14~15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 (ESCAP)	방콕	2017.11.6~8
서아시아 지역협의 (ESCWA)	베이루트	2017.9.26~28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협의 (ECLAC)	산티아고	2017.8.30~31
기타 국제적·지역적 절차, 메커니즘 및 이니셔티브		
IOM—이주에 관한 국제대화(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IDM) “국제협력 및 이주 거버넌스 강화”	뉴욕	2017.4.18~19
ILO 정기총회	제네바	2017.6.5~17
인권이사회	제네바	2017.6.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글로벌포럼 (GFMD) 10 차 회담	베를린	2017.6.28~30
IOM—이주에 관한 국제대화(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IDM) “이주자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	제네바	2017.7.26~27
IOM—지역협의체들의 모임	제네바	2017.10.10~11
Informal interactive multi-stakeholder hearings		
Informal interactive multi-stakeholder hearings 1~4 차 주제에 대해 NGO, 디아스포라, 학계, 의회, 민간기업 관계자 등 협의	뉴욕	2017.7.26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협의	방콕	2017.8.4~5
Informal interactive multi-stakeholder hearings	제네바	2017.10.11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권고사안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제 1 주제) 모든 이주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 외국인 혐오, 차별과 불관용 반대

<뉴욕선언>에서 명시된 쟁점 사안

- 이주자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주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 취약 상태에 놓인 이주자의 구체적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각 수용국 사회의 실정에 걸맞은 사회통합의 추진. 젠더에 따른 필요 등을 반영한 기초 복지서비스 제공.
- 모든 이주자에 대한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차별 및 비관용의 철폐를 위한 노력

[시민사회 권고사안]

- (1) 취약상태 이주자 보호를 위해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이주자 인권보호 원칙의 검토와 적용을 강화한다.
 - a. 미등록 체류 이주자에 대한 범죄자화와 이들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한 범죄자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한다.
 - b. 성폭력 및 범죄 피해 이주자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비자시스템을 마련하여 불안정한 체류로 폭력과 피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방지한다.
 - c. 미등록 체류 이주자 단속, 구금, 추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적 관점의 제도운용 방안을 마련한다.
- (2)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 a. 외국인 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젠더 관점의 정책을 수립한다.
 - b. 이주여성 지원체계는 여성인권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우선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 c. 폭력 피해 지원의 정책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여성 유학생, 이주여성노동자, 성매매 피해 여성, 인신매매 피해여성 등 모든 이주여성으로 확대하고,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한다.
 - d.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기관의 이용에 있어 내국인 여성과 이주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
 - e. 이주여성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긴급위기개입, 상담소를 통한 일상적인 개입과 지원, 보호시설을 통한 중단기적 개입이 적절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기관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한다.
 - f.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원상회복과 쉼터 이후의 생활에 있어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신체적 및 정서적 자립지원과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연계 정책을 마련한다.
 - g.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시스템을 마련한다.

대한민국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이주여성 지원기관이 있으나, 국내 폭력피해여성에 비하여 지원체계가 취약하여 정착 이주여성이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24 시간 긴급지원이 가능한 독자적 체계는 없고,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와 쉼터만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주여성 관련 정책은 내국인과 혼인관계를 형성한

“다문화가족”정책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협소하게 정의된 다문화가족만을 그 업무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현행 외국인 비자 제도에는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정적 체류 방안이 부재한다. 이로 인해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체류가 불안정한 폭력 피해자는 추방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폭력 피해 신고를 꺼리게 된다.

(3) 이주아동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 a. 체류자격과 관계 없이 모든 이주아동이 출생사실이 등록될 수 있도록 국내법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세부목표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
- b. 아동이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교육, 건강, 보육, 아동보호와 관련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 c.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체류자격이 불분명한 이주아동이라 하더라도 체류자격만을 이유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를 금지한다.
- d.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이주아동은 보육, 교육, 건강, 사회복지 등의 측면에서 국민인 아동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5만 명의 이주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체류자격의 증명 없이도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학 허용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로 입학이 거부된다 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보험제도에서도 배제되고 있고, 정부로부터 보육 지원을 받지 못하며,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대다수의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내부 지침을 통하여 학교에 재학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고등학교 과정 수료시까지 강제출국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지만, 1년에 100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거나 구금되고 있다.¹ 이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자랐거나 장기간 성장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갖고 있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난민, 미등록 이주자의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국적을 가질 권리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다.

(4) 이민당국과 행정서비스 간 방화벽 설치와 관련하여,

- a. 미등록 체류 이주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 b. 미등록 체류 이주자들의 송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민당국과 행정 서비스 간의 ‘방화벽’ 설치 등 영토 내 체류하는 이주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1) 미등록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에 대한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2) 미등록체류 사실을 이민당국에 통보할 의무를 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범죄에 대한 공무원의 일반적인 고발의무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미등록 체류 이주자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학교, 공공보건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무원의

¹ 법무부 화성, 청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공개 자료 (2015. 10. ~ 2016. 8.)

통보의무는 면제되고 있으나, 여전히 (1)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따른 피해자², 형사사건에 대한 증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부모 등 면제 조항에 포괄되지 않은 미등록체류자들이 많은 문제; (2) 실제 법 집행에 있어 면제 대상 범위가 불확실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국가기관의 접촉을 기피하는 문제; (3) 면제조항은 공무원들이 이민당국에 미등록체류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면제하는데 그쳐, 자의적인 통보 및 고발을 차단하는 방화벽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적인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다.³

(5) 국가 보건정책 수립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간 차별이 없어야 하며 모든 이주자가 자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치료기관에 대한 안내와 접근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한다.

- a. 이주노동자의 건강상 불이익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과 적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주의 직장건강보험 당연 가입, 신고 의무화와 함께 미가입시 제재조치를 포함하여 건강보험 가입과 적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b. 이주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시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조항 적용 및 체류자격 변경시 건강보험 자격상실로 인한 불이익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 c. 체류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보장 및 보건소 이외의 접종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
- d. 이주자의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국어 의료정보 서비스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통역/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6) 외국인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위기대응 종합체계를 마련한다. 대응매뉴얼, 대응시스템, 다국어 정보제공, 긴급상황시 도움기관 연결망 등이 필요하다.

- a. 공공의 외국인지원기관들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시행한다.
- b. 국가의 긴급상황에 사용하는 핫라인이 다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c.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들이 위기사 사회안전망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한다.

(7) 인종차별과 관련하여,

- a.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
- b.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침해의 경중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부가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 c. 인종차별사건의 수, 고소인의 국적과 법적지위, 고소에 대한 수사와 기소비율과 그 결과에 대한 자료와 통계를 작성한다.
- d. 대중매체, 인터넷, 사회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여 인종우월주의적 선동이나 외국인 혐오발언 또는 이를 포함한 정치 선전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개인이나 단체 및 정당을 적발하여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한다.
- e. 미디어가 자발적 윤리 행동강령과 자기규제 조치,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관행을 개발 및 시행한다.
- f. 이주와 이주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이주자의 자기표현 기회 확보를 위해 공공채널을 지원한다.

² The Hankyoreh, "Seeking his unpaid wages, Vietnamese migrant worker is reported as 'illegal'", Dec 5, 2014.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667722.html

³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 제도는 미등록 체류 이주자도 수혜대상이므로 이민당국 및 행정 서비스 간 방화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p.3, Position Paper #1,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그러나 200 여명의 상담 변호사가 20 여만명의 미등록 체류 이주자를 위한 '방화벽' 역할을 수행하는 것의 한계는 명백하다.

- g. 인종차별금지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모든 시민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와 교육체계를 구성한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표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다른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 및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2016 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슬람 반대, 차별금지법반대를 주장하는 기독교자유당이 출마했으나 정부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⁴ ⁵이에 선거기간 동안 특정종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들을 담은 자료들이 선거 공보물이라는 이유로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배포되었다. 기독교자유당은 최종 총 투표수의 2.63%를 획득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다.

제 2 주제) 국제사회 차원의 보호 및 지원, 지속가능발전, 빈곤퇴치, 분쟁예방과 해결 등 이주원인 대응

<뉴욕선언>에서 명시된 쟁점 사안

- 이주자와 그 가족에게 국제이주가 기회일 수 있음을 인정.
- 개발, 빈곤근절,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등을 포함하여 이주가 발생하는 배경을 다룰 필요성 이해.
- 이주가 출신국가 인적 자본에 끼치는 영향 이해.
- 위기발생 국가 이주자 상황에 대한 대응

[시민사회 권고사안]

- (1) 이주자와 그 가족에게 국제이주가 기회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 a. 이주노동자에게 가족동반을 허가하고 모든 교육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b. 이주노동자를 단기적으로 순환하여 사용하는 정책을 지양한다.
 - c. 장기 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폭넓게 개방한다.
- (2) 개발, 빈곤근절,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등을 포함하여 이주가 발생하는 배경을 다룰 필요성과 관련하여,
 - a. 해외원조의 규모를 국제기준에 맞게 증액한다.⁶
 - b. 해외원조는 원조 수여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원조 수여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 c. 원조의 집행은 수여국의 인권, 발전권, 환경보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3) 이주가 출신국가 인적 자본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 a. 국가간 인력송출계약은 정부간계약을 통해 송출과정과 비용을 투명화, 최소화한다.
 - b. 국가간 인력송출시스템은 송출국가의 지속가능한 사회개발과 인적자본 양성을 면밀히 고려하며 설계 운영한다.
 - c. 국가간 인력 송출시스템은 이주노동자 개개인의 비용 뿐만 아니라, 송출국의 전체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d. 이주 노동자를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 (비자발급비용, 교통비, 언어, 노동, 직무 교육비)은 유입국에서 부담한다.

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0500132>

⁵ The Christian Liberty Party website: clparty.kr/about

⁶ 2015 년 기준, 대한민국 GNI 대비 ODA 기여 비율은 0.14%,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 평균 0.3%. UN 이 정한 목표인 0.7%.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9568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현재 한국과 MOU 를 체결한 인력송출국가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 한국에 갈 이주노동자를 선발하고 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기 위해 오랜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 본국 사회에서 경제사회발전에 힘써야 할 많은 젊은 인력들이 이주노동을 준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적지않은 비용을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쓰도록 강요되고 있다.

이는 송출국의 경제사회 및 인력구조에 큰 타격을 입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4) 위기발생 국가 이주자 상황 대응과 관련하여,

- a. 특정 국가에서 위기발생시 그 나라 출신 이주자가 현재 체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체류비자 형태 및 유무에 상관없이 체류허가 및 체류 연장조치를 취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 b. 긴급 구호와 대피 지원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이 시행한다.

제 3 주제) 국경관리 (입국, 경유, 귀환, 재입국) 통합과 재통합 등 이주에 대한 국제협력과 거버넌스

<뉴욕선언>에서 명시된 쟁점 사안

- 계획적으로 잘 운용된 이주 정책 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질서있고 책임 있는 이주와 사람의 이동을 가능케함. 이는 안전하고 정규적인 이주 경로의 조성 및 확대를 포함.
- 이주 거버넌스 개선을 목표로 국제협력의 범위를 확대.
- 이주자 인권 존중과 보호를 기반으로 한 국경관리 및 이에 대한 국제협력
- 수용국가에 대한 이주자 책임, 의무
- 귀환 및 재입국 등을 위한 출신국과 목적국 간의 협력관계 개선.
- 국제이주에 관한 항목별 정보 수집.
- 이주의 모든 측면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

[시민사회 권고사안]

(1) 기관 간 연계, 영사 업무와 관련하여,

- a. 국제인권기준과 난민법에 따른 국경관리 정책 수립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공무원 교육과 훈련, 법집행기구들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구조, 입국심사와 입국, 체류관련 신속한 결정 및 지원한다.
- b. 난민신청의 경우 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난민 가족 결합시 출신국 내 수용국 대사관은 협조하고, 난민 신청시 출신국에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c. 외국인의 추방, 귀환, 또는 송환을 결정할 때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 3 조의 요건들이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입국시, 퇴거결정시와 같은 실제 추방, 귀환 또는 송환 절차단계에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지 않게 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 d. 이주자의 자발적 귀환을 위해 여권, 여행증명서 등과 같은 개인서류 발급(특히 미등록 체류 이주자에 대한) 등 출신국과 수용국간 영사업무 담당관간 실효성있는 협력을 통해 귀환과 재입국을 원활히 돕는다.

(2) 귀화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 a. 국적 관련 법령에서 귀화요건을 보다 투명하고 예견 가능하게 규정하고, 귀화절차는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방식으로 설계 한다.
- b.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자가 이혼 후에도 거주자격을 취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 c. 난민과 그 자녀, 무국적자가 귀화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 귀화제도와 비교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귀화 허가 요건의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규정(제 5 조 제 3 호)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행단정 요건에 위반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과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을 납부했거나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이주자의 경우 이를 이유로 국적취득이 거부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국민인 외국인을 위한 간이귀화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혼 이후에 국적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부담이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체적 폭력 외에 감정적 폭력이나 재정적 오용인 경우 국적 취득이 거부된다.

대한민국은 난민에 대한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지 않고 다른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난민의 자녀를 비롯하여 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가운데 한 명이 귀화를 허가 받아야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뿐 달리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없고, 성년이 된 후에 일반귀화요건을 갖추어야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무국적 상태로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최근 귀화 요건 중 “생계유지 능력” 기준에 대한 국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6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제3조 제2항), 난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3) 이주구금과 관련하여,

- a. 외국인 보호시설은 범죄에 의한 구금 조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보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보호시설은 교정 시설이 아니므로, 보호시설 내 생활이 일상생활과의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권적 관점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보호 외국인은 범죄자가 아닌 행정법 위반자라는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보호되는 동안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b.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보호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구금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호 시 구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기간 내 출입국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현행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소 등의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행위를 ‘보호’라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이라는 행정법을 위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에 보호되는 동안 보호실 밖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며, 엄격한 규율을 강요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주체인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제도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것이며, 이들은 언제든지 출국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보호시설에는 ‘구금’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무기한 구금도 자의적 구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 국외에서의 국경통제와 관련하여,

- a. 국경 통제에 대한 주권 행사 시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한다.
- b. 국외에서의 직·간접적 입국 통제는 강제송환금지원칙 등 국제인권법 상 인정되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다수의 국가들은 승객정보(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API)를 착륙 전 이민당국에 송부할 것을 항공사에게 요구하여 비행 중인 승객의 입국 가부를 심사하거나⁷, 적절한 비자를 구비하지 못한 승객을 운송한 항공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주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국외에서의 국경통제는, 이주자의 인권 또는 난민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거나 분리되어 시행될 위험이 크다. 특히 (1) 구체적인 입국심사가 없는 직·간접적 입국 거부는 오남용의 위험이 있는 점; (2) 보호의 필요성이 큰 난민의 경우 서류의 미비, 비자 불비 등을 이유로 탑승이 거부될 개연성이 높은 점; (3) 국외에서의 직·간접적 입국 거부 대상자가 절차적으로 다투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외에서의 국경통제는 국제인권법에 부합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5) 귀환 및 재통합과 관련하여,

- a. 이주자의 귀환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b. 이주자의 자발적 귀환을 위해 출신국과 목적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귀환 전에 충분한 정보제공, 준비기간, 본국 재정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 c.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은 이주노동자의 귀환 전에 지급하고, 귀환을 조건으로 퇴직금 및 임금을 비롯한 금전의 지급을 미루지 않는다.
- d. 이주자의 추방, 귀환, 또는 송환을 결정할 때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 3 조의 요건들이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입국시, 퇴거결정시와 같은 실제 추방, 귀환 또는 송환 절차단계에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지 않게 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 e. 이주자의 비자발적인 귀환의 경우 이주자의 본국 입국 후 경찰이나 이민공무원이 가족이나 주택을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이들의 지위나 생계유지 등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다.
- f. 이주자의 강제퇴거는 귀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귀환과 재통합은 순수한 이주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귀국 결정과 이에 따른 준비과정(체류기간에 따른 준비기간 최소 3 개월에서 6 개월) 및 본국 귀환에 따른 적응과정 및 재통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출신국, 목적국 정부간 협력한다.
- g. 이주자 출신국 정부는 출국 전 훈련 프로그램에 귀환 및 재통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법 조항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시민사회는 이주노동자 귀환과 재통합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다.
- h. 목적국내 이주자 송출국 영사관 및 대사관에서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과 본국 사회 재통합을 위한 서비스(관련 정보와 교육제공)를 강화한다.
- i. 이주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재통합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주자, 이주자 가족, 이주자 본국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정부, 이주자 목적국의 시민사회, 정부 등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
- j. 귀환프로그램이 미등록체류를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주가 강제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하듯 귀환과 목적국내의 체류 또한 이주자의 선택이어야 한다.

(6) 취약계층 구별 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이주자에 대한 생체인식정보 혹은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확인은 엄격한 인권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⁷한국의 경우 API 를 발권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송부하게 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탑승을 불승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발권을 거부하는 엄격한 형태의 제도를 201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 4 주제) 송금, 소득이동 등 이주자와 디아스포라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기여

<뉴욕선언>에서 명시된 쟁점 사안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국제이주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개발에 중요한 연관을 가지는 다양한 측면의 현실임.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주자의 기여와, 이주와 개발의 복합적인 상관관계.
- 이주자 본국송금이 개발 등에 기여하는 점. 합법적 경로로 본국 송금이 더 빠르고, 값싸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송수신국 양쪽에서 송금비용을 절감하는 등 노력.
- 디아스포라의 기여를 촉진하고 출신국가와의 연계를 더 강화

제 5 주제) 밀입국이주자,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호 지원의 문제

<뉴욕선언>에서 명시된 쟁점 사안

- 인신매매, 이주자 밀입국, 현대판 노예제 등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며 각 상황에 맞게 일시적 체류자격/ 영주권 및 취업허가 등 지원 제공

[시민사회 권고사안]

- (1) 관련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에 따른 인신매매 행위의 정의 및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등 법 제도를 정비할 의무를 규정 한다.
- (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에 장애가 되는 다른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정비할 의무를 규정한다.
- (3)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한다.
- (4) 이주노동자는, 그 명칭, 송출 및 유입경로, 취업업종이 어떠하든 노동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 (5) 이주노동자제도는, 송출, 도입, 취업, 귀국 등 이주의 전 과정에서 철저하고 일관되게 공공적 원리에 기초하여 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한다.
- (6)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권리를 제한하는 이주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을 인신매매, 강제노동 및 현대판 노예와 같은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이주노동자제도에서 업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노동권 보호, 인권침해시 구제와 보호를 위해 법적, 사회심리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UN인신매매의정서의 폭넓은 비준과 지역인권협약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는 일부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인신매매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에 개정된 형법은 인신매매 규정 조항에 있어 인신매매의정서 상에 규정된 행위 및 수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고만 되어 있어 인신매매의정서 상의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 전혀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업⁸ 및 농업⁹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과 예술홍행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이 노동 및 성 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들이 인신매매로 기소된 바가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착취를 견디다 못해 업소를 이탈한 예술홍행비자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또한 2014년 착취를 당하다 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베트남 어선원들은 오히려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했다.

제 6 주제) 비정규이주 및 양질의 고용, 노동 이동, 상호자격인증 및 정규화 방안

<뉴욕선언>에서 명시된 쟁점 사안

- 비정규이주의 발생건수와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
- 이주노동자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전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노동자를 보호하며, 순환 이주를 포함하여 국제노동이동 장려
- 이주자 지위를 정규화하는 정책 수립 고려.
- 해외에서 취득한 교육, 기술 등 자격을 인정해주고 (연금, 보험 등의) 사회보장 수익 (국가 간) 이동 허용을 고려

[시민사회 권고사안]

-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MW)을 비롯한 이주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 중 비준하지 않은 협약, 특히 ILO 강제노동협약 제 29 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 105 호 등을 신속히 비준하여야 할 가입국의 의무를 확인한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MW)은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 받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다른 주요 협약 및 권고와 결합하여 이주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인권법 체계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아직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MW)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편 난민과 이주자에 관한 뉴욕 선언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MW) 등의 국제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자의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가족결합권 등의 이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2) 비정규이주의 발생건수와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 a. 각국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중 세부목표 10.7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는 원칙을 국내적으로 이행한다.
 - b. 비정규 이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안전한 이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는 이주노동자의 정규적인 지위의 보장, 공식 노동조건과 계약 등 모든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와 동의, 본국과 목적국의 사회적 및 법적 지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노동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⁸ The Korea Herald, “Activists call for improvement in migrant fishermen’s human rights,” Sep 5 2017,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905000873>.

⁹ Amnesty International, Bitter harvest: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of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in South Korea, Oct 20 2014,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004/2014/en/>

- c. 이주노동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합법적인 채널이 제공되도록 정부 대 정부간 양해각서 체결과 인권, 노동권 보호를 위한 책임이 양해각서에 명기, 이행한다.
- d. 과도한 송출비용을 갚기 위해 목적국에서 초과체류하지 않도록, 송출비용을 이주노동자에게 부담하지 않는 정책 도입과 과도한 송출비용을 부과하는 송출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법제화를 시행한다.
- e. 이주노동자가 정규지위를 잃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나 법의 미비로 미등록 상태가 되지 않고 고용주/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이주노동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 모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 a.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춰 이주 노동자에 대해 차별 없이 노동권을 적용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며,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 등에서 노사의 동등함이 보장되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한다.
- b. 이주노동자들이 구직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자발적 선택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한다.
- c. 이주노동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 없이는 사업주가 어떠한 이유로도 여권 등 신분증, 항공권, 통장이나 카드 등 금융거래 수단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d.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사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업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일일 휴게시간, 유급 주휴일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작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e. 단기 및 초단기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반인권적인 조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한다.
- f. 농축산업, 임업, 어업 등 외부와 고립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외부의 조력으로부터 취약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모국어 또는 편한 언어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보고 및 전달 체계를 갖춘다. 나아가, 이를 d 위해 전문성을 가진 충분한 수의 근로감독관을 양성하여 고용근로 환경에 대해 철저히 감독한다.
- g.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소를 제공하고, 이러한 숙소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는지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다.
- h. 귀환을 앞둔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에 있을 경우에는, 출국 전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i. 이주노동자가 폭력, 차별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출국 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 j.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농축산업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농축산업의 특성 상 지리적으로 외부와 고립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장시간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며, 노동 시 휴게시간, 유급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사업장 이탈 비율이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아, 농장주들이 노동자의 이탈을 막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분증을 압류하는 등의 수단을 취하고 있다.

어업

국내 연근해 어선과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은 조업 위치 및 선박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와 범위의 법률을 적용받으며 그 고용 과정 또한 상이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20톤 미만 연근해 어선의 이주어선원을 제외한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 어선의 이주 어선원은 송입과정에서 송입업체 및 송출업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어업의 특성상 이주 어선원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지만 노동 시 휴게시간,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양어선의 경우 어선원 중 약 70%가 이주 어선원일 정도로 이주 어선원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이들은 임금 산정에 있어 수익에 비례해 보상을 받는 보험제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다층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선주들은 이주 어선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분증, 통장을 압류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실정이다.

(4) 이주 노동자에 대한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과 관련하여,

- a.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한다.
- b. 최대 국제기준 최소 국내기준에 의해 관리대상, 측정대상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 유해요인의 차단과 정기적이고 충실한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 c. 특별히 산업안전에 취약하고 산재발생율이 높은 업종의 이주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시행한다.
- d. 사업주의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보호구 제공 의무의 이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수행한다.
- e. 산업재해임에도 법률적, 제도적 미비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시행한다.
- f. 산업안전, 산재예방과 보상에 관한 교육과 관련 정보들은 이주노동자의 자국어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
- g. 이주노동자들의 산재피해에 대한 치료, 보상, 재활, 직업훈련에서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 h.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 보상, 재활, 직업훈련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보장하여야 하며, 산재피해자의 간병을 위해 본국의 가족이 필요할 경우 수월한 입국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한다.
- i. 산재 치료종결 후에, 본국 귀환시 후유질병 등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판정을 받은 후 본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이유로 영주 자격을 부여한다.
- j. 산업안전과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이주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통번역시스템을 갖추도록 조치하며, 출입국관리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되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한다.
- k. 산재피해를 입고 관련 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귀국 후에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
- l. 이주노동자가 귀국 후에, 이주노동 종사시의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환이 발병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당사국 체류시의 산재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동등한 조치를 시행한다.

(5) 이주 여성 노동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 a.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세부목표 8.8에 따라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 b.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성보호 조항을 적절히 누리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감독한다.

- c. 이주여성노동자의 숙소는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관리감독한다.
- d. 이주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 낙태시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e. 이주여성노동자의 성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 f. 이주여성노동자 고용사업장에는 성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한다.
- g. 이주여성노동자가 성폭력피해를 신고할 경우 즉시 사업장 변경조치를 시행한다.
- h. 비정규 이주여성노동자가 성폭력, 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체류자격을 보장하며, 출국조치 전에 충분히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i.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성매매, 인신매매로 유인되지 않도록 예방 및 인권보호조치를 수립하고,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로 사업장을 이탈한 이주여성노동자의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법적 처벌을 면제한다.

(6) 순환이주를 포함한 국제노동이동에 관하여,

- a. 단기순환 노동이주제도는, 그 제도가 갖는 다면적 측면에 대해 종합적, 통합적, 장기적 필요성의 충분한 검토 후 수립하고, 특별히 인권침해와 사회보장혜택 박탈 가능성, 가족이산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중시하여 반드시 국제수준의 노동권, 인권보호를 보장한다.
- b. 숙련된 임시 이주노동자 혹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임시 이주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지 않는다.
- c. 임시이주노동자가 영구이주노동자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
- d. 보다 유연하고 장기적이고 갱신 가능한 취업 비자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을 폐지한다.
- e. 노동이주와 노동이동성에 관해 현존하거나 새로운 국내, 양자간 및 다자간 협약을 채택한다.

(7) 비공식 서비스 부문의 가사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 (ILO 협약 제 189 호)”를 비준하고 국내 노동법 적용과 사회보장을 전면 실행한다.

(8) 이주자 지위를 정규화하는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 a.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언어, 문화, 기술 습득 정도에 따라 산업 수요에 기초한 정규화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 b. 이주자 지위를 정규화하는 정책은 양자간, 다자간 협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9) (연금, 보험 등의) 사회보장 수익 (국가 간) 이동과 관련하여,

- a. 대다수 비정주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기간에 수입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나 그 수익은 향유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하며, 당사국은 비정주 이주노동자들의 귀환시 사회보험료의 반환일시금 지급 등과 같은 국가간 이동이 수월하도록 입법적 조치 시행한다.
- b. 합법적인 사회보험료의 반환일시금 혹은 사회보장의 수익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이주노동자를 위하여 해당 금액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시행한다.

[부록]

제 1~5 차 정부간 협의 결과 보고서 요약정리

유엔 국제이주기구 IOM 한국사무소

제 1 주제) 모든 이주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 외국인 혐오, 차별과 불관용 반대

- 총 71 개 국가대표, 7 개 유엔 기구, 12 개의 비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패널 협의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 참가:
 - 이주자 인권: 이주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본 글로벌 협약의 중심에 놓여야 함
 - 사회 통합: 보건, 교육 및 고용 기회가 이주자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중요성
 - 모든 형태 차별: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주의 등에 맞서기 위한 데이터수집, 사회적 논의, 미디어 역할 외
- 관련 사안: 전반적 체계와 원칙, 취약성, 비정규 이주, 인권 및 이주관리, 구금, 사회 통합, 보건, 교육, 노동권, 사회적 인식 및 논의, 차별, 데이터 등.

논의 사항 및 정책 제언:

가. 전반적 체계와 원칙

- 국가 인권위원회와 옴부즈만(신문고) 및 이주자 인권과 관련한 특별 (보고)절차, 조약의 역할 강화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인권 조약 서명 및 비준
- 보호를 이행함에 미비한 분야를 확인하고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국제법을 적용
- (이미 비준한 국제조약 등에 의해 발생한) 인권 보호 의무를 하나로 통합—예를 들어 지침서의 형태로.
- 특히 취약성과 관련된 이주 용어들의 정의를 확립
- 영사보호를 포함하여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서덜랜드 보고서(Sutherland Report) 내 제언을 이행할 목표로 보고서의 실용적 방안들을 검토
-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기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컴팩트의 여성 인권문제 관련,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제언 참고

나. 취약성

- 대규모 그리고/또는 뒤섞인 이동* 속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글로벌 이주 그룹 (Global Migration Group) 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킬 것. 이는 정부 전문가, 국회의원, 시민사회, 노동조합, 유엔 기구 및 국제기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위험에 처한 여성과 소녀,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노인과 장애인 등 특히 취약한 이주자의 구체적 필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 취약한 상황의 이주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국경 심사제도를 확립할 것
- *위기 상황 국가 내 이주자 이니셔티브(Migrants in Countries in Crisis Initiative, MICIC) 및 분쟁 또는 자연 재해 상황의 국가 내 이주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to Protect Migrants in Countries Experiencing Conflict or Natural Disaster)*을 참조할 것.

-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통하는 등,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의 필요와 인권보호에 대응
- 무국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증명서 발급
- 미등록체류자를 포함하여 취약한 상황의 이주자를 대할 때 인도적이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처우를 함

다. 비정규 이주

- 비정규 이주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이들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출입국당국 사이에 방화벽을 둠
- 가족재통합을 위한 이주 및 노동이주 등의 정규 이주 채널과 이주방안을 장려
- 미등록이주자의 체류자격 정규화 방안 마련

라. 인권 및 이주 관리

- 사법기관과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주자 인권보호에 대한) 감수성/의식을 키움
- 상황에 따라 지역적 협력을 활용하는 등,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제공
-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존엄성 있는 귀환을 보장하기 위해 출신국과 목적국 간 협력과 파트너십 증대
- 국경에서의 보호 필요를 식별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특히 입국(적법한 혹은 비정규적 방식의) 또는 재입국하려 하는 사람의 체류자격이 불분명한 경우 그 보호 필요를 식별하는 때.
-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의정서의 휴먼 트래피킹이나 이주자 밀입국 알선과 같은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대응. 이는 정책 강화, 국제 협력강화, 국경 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주자가 사법적 구제를 피할 수 있게 법률 지원을 제공
- 귀환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감독 메커니즘 도입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떨어진 아동의 귀환을 위한 별도 절차 마련

마. 구금

- 구금의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장려할 것. 예컨대 등록 의무, 문서 보관, 보석금, 보증인, 신고 의무, 케이스 관리, 조건부 석방, 주거지 지정, 전자 감독, 외출제한명령/가택구금, 자발적 귀환 지원 등 사례 공유
- 고문 등 인권 침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구금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
- 아동 자신,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체류 자격을 문제로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을 근절할 것
- 구금 기간 단축, 구금 환경 개선

바. 사회통합

- 입국 후 가능한 신속하게 이주자에게 사회 통합을 위한 적절한 언어 교육 제공
-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주자의 이해와 의식을 개선
- 지역개발 계획에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 내용을 포함
- 이주자에게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지원센터 설립
- 이주자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
- 시민권 부여 등 체류자격 정규화를 위한 방안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

사. 보건

- 글로벌컴팩트의 준비과정에서 이주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측면을 계속 협의할 것
- 이주자의 보건의료 접근권에 대한 국가 정책들을 맵핑할 것
-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보다 이주자 공동체의 예방의학/보건에 투자할 것
- 여성 이주자, 보호자 미동반 아동, 장애가 있는 이주자의 보건/의료 필요를 유의할 것

- 의료전문가의 문화적 이해/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
- 환자를 위해 전화 등을 이용한 통역 서비스 제공

아. 교육

-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접근권 보장
- 초·중·고등 교육과정 모두 이주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과를 포함할 것
- 대학에서 외국 국적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장학 프로그램 개발
- 이주자의 교육 접근에 대한 국가 정책들을 맵핑

자. 노동권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공정 채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노동자가 지불하는 송출비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ILO의 방법 활용
- IOM이 주도하는 *International Recruitment Integrity System (IRIS)*를 지원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행을 위한 국가 단위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기업들이 해당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지원
- 자격 인정(교환)을 위한 국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국내적으로는 필요한 노동력에 대한 자격 인정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마련
- 기술개발과 훈련을 위해 사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학대와 착취를 모니터링하고 방지하기 위해 사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 이주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 보장
- 기술과 노동시장 수요를 일치시키는 노동 이주 정책의 수립

차. 사회적 인식 및 논의

- 지방,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 협의에서 긍정적이고 사실증거에 기반한 이주 내러티브를 만들고 전파
- 이주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주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믿음을 불식시키기 위한 국가적 인식 개선 캠페인 시작. 예컨대 대규모 스포츠 행사나 대중문화 행사에서의 캠페인
-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주자와 지역공동체간 대화 촉진
-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이주자와 접할 기회를 늘려, 사실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양질의 언론 보도 장려
- 윤리적 광고 장려
- 학교에서 이주에 관한 미디어 교육을 제공
- 이주자 개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성 언론매체 및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
- (이주자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 보도의 책임을 묻는 제도 마련

카.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불관용 등

- 더반 선언과 행동강령(DDPA)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주자에 대한 행동계획 수립
- 의료진, 교사 등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인종주의, 제노포비아에 기반한 증오범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훈련
- 증오범죄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법률 지원, 배상, 구제 등을 통한 피해자의 사법접근 촉진
- 사법기관 공무원이 증오 범죄를 식별 및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제노포비아, 인종 차별 등을 예방,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 수립
- 차별 등 모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이주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접근 보장

- 국가적 또는 지역적 모니터링 플랫폼, 구제 장치 또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책무성(accountability)과 각종 지원에 대한 이주자의 접근을 보장
- 심각한 수준의 차별 행위와 중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제정
- 데이터 수집을 위한 조약기구 활용 및 국내 협의 절차에 이주자 의견 포함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을 국내법에 통합시키고 이를 점검하고 검토하기 위한 메커니즘 마련
- 유엔 사무총장의 TOGETHER 캠페인과 IOM의 “나는 이주자입니다(I am a Migrant)” 캠페인 지원
- 외국인 혐오증(제노포비아)을 국제사회 공동 책임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활용
- 관용에 관한 기준 수립

타. 데이터

- 항복별 데이터의 수집, 분석, 정책화 개선
- 혐오발언과 혐오범죄에 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수집
- 국가 인권 기구나 유엔 조약 기구의 데이터 등 기존 데이터 활용

제 2 주제) 보호, 지원, 지속가능발전, 빈곤퇴치, 분쟁예방 및 해결을 통한 이주원인 대응 (5/22~23, 뉴욕)

- 총 109 개 국가대표, 8 개
- 석 범위를 지유엔 기구, 12 개 비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패널 협의로 나뉘어 진행
 -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퇴치: 이주와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이 강조되었으며 본 글로벌 협약을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지속가능개발목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파리협정, 샌다이 프레임워크 등의 연장선상에 놓을 것이 강력히 요구됨.
 - 이주원인으로서의 인재: 본 글로벌 협약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하는 “부정적” 이주원인의 경감과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 이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함. 또한 이주에 관한 글로벌 협약과 난민을 위한 글로벌 협약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에 따라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자의 보호 필요를 식별하고 이를 다루어야 함.
 - 이주원인으로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는 지금까지 이주 관련 논의에 있어 비교적 주목 받지 못했음. 이주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의 실패가 아니라 적극적 적응 전략임을 확인.
- 관련 사안: 전반적 체계와 원칙, 이주의 여러 원인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빈곤퇴치 및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주자의 기여, 이주의 환경적 측면, 지속적 평화, 데이터 등.

논의 사항 및 정책 제언:

가. 전반적 체계와 원칙

-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 준수에 대한 의지 재표명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등 기존 국제법을 비준하고 효과적으로 적용
- 노동자에 관한 ILO의 기본적인 협약들 비준
- 모든 이주 단계에서 젠더를 고려한 대응을 하는 등 이주 원인 중 젠더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
- Human Rights Up Front (HRUF) Initiative 등 무력 분쟁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을 지원
-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GFMD) 등 글로벌 프로세스와 기존의 지역협력, 양자협력 체제를 활용하여 정책 공유, 중복 회피 및 시너지 효과 촉진
- 위기 상황 국가의 이주자 이니셔티브(Migrants in Countries in Crisis Initiative, MICIC Initiative), 난센 이니셔티브(Nansen Initiative)와 그 뒤를 잇는 이재이주플랫폼(Platform on Disaster Displacement)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틀 안에서 확인된 우수 사례를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실행

나. 이주의 여러 원인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떨어진 아동 등 취약한 상황의 이주자, 특히 지원은 필요하나 난민으로서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처우에 관하여 국제법을 준수하는 구속력 없는 규범적 원칙개발
- 인도주의적 지원 및 개발 협력 공동의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일관성있는 접근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의거하여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간 협력을 통해 모든 분야에 걸쳐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이주 시스템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 수립

다. 빈곤퇴치 및 포용적 성장

-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의 체계 안에서 실행사항 위주 로드맵 개발해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주의 관점에서 이행
- 경제 성장 및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 중앙·지방 개발 정책, 계획, 전략에 이주를 통합
- 이주를 공동의 어젠다에 통합한 양자 또는 지역적 개발 계획과 전략 수립을 고려
- 개발 협력을 위한 자원 증대 및 예측가능한 자원 조달 제공 확대
- 투자 촉진, 교육 접근성 향상, 양질의 고용 기회 창출 등 고숙련 노동자가 자국에 남아있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이주자의 접근성 향상
- 출신국 내 고용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디아스포라와 연계하여 무역과 투자 촉진
- 특히 젊은 층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출신국과 목적국에서 경영 방법에 관한 훈련 제공
- 국내 기관의 데이터 수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개발 지원 자원 증대

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주자의 기여

- 노동 시장의 필요를 고려하여, 상호이익적인 기술 개발과 기술 유동성을 연결하는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 등 혁신적 이주 모델을 실험
- 일정 기간의, 또는 계절적/순환적 고용 프로그램 수립하여 업무 능력(언어, 기술 등) 향상, 계절적 노동력 부족 해소, 가구소득 및 지역사회 회복력 증대.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공적으로 지원
- 개인의 이동과 자격 인정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 이주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법접근성 보장, 영사과의 역량 강화, 경유 등에 대한 영사 협력 촉진
-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디아스포라와의 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두뇌 유입”을 위한 정책 도입
- 사기업과 연계한 워크숍, 이주자 대상 프로그램,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해 이주자의 금융적 통합 촉진과 금융 분석 능력 향상
- 양자 혹은 지역적 합의를 통해 이주자 해외 송금의 수수료를 낮추어 더욱 빠르고, 적절한 가격의 해외 송금 촉진
- 이주자 해외 송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송금 서비스를 비교해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
- 안전한 이주자 해외 송금 서비스 이용과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이주자가 본인 인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국가와 사기업 간 이주자 해외 송금에 관한 정기적 협의 장려
- 국내 경제로 이주자 해외 송금을 끌어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 예로 이주자가 투자하는 금액만큼 국가가 투자하는 방안이 있음.
- 이주자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자국민과 균등한 정도의 기본적 사회보장 제공
- 노동 이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고용 기회 파악 및 활용,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 제공, 취득한 이익의 유동성 증진, 노동권 보호, 이주자와 고용주, 그리고 속한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불평등 감소

마. 이주의 환경적 측면

- 재해 위험 경감, 회복력, 대비, 경감 및 적응에 관한 시행 사안의 국제적, 지역적 공유와 협력 강화
- 인접국과 자연 재해 발생 시 국경 간 이재이주에 관한 계획을 수립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이전과 혁신적 자원 조달 메커니즘 수립

- 기후변화와 재해위험경감에 대해 이주 관련 측면에 초점을 맞춘 더욱 일관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 제도 사이의 연계 추진
- *재해와 기후변화 상황에서 국경 간 이재이주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어젠다(Agenda for the Protection of Cross-Border Displaced Persons in the Context of Disasters and Climate Change)*에서 제공하는 톨박스 활용 및 추후 추가적 개발
- 회복력과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범분야 전략계획에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통합. 재해 발생 전 국가 적응 계획에 이주적 요소를 포함.
- 국가 및 지역의 기후 위험 현황 평가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노력
- 이주 또는 계획된 재정착 등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적응 노력 지원
-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생명을 구하고 피해인구가 본 주거지로 돌아가는 등 다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
-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일정 기간의 노동 비자 발급. 이와 동시에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지속가능한 귀환을 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로 인해 이재이주한 사람들을 위한 노동 유동성, 주거, 자유로운 이동 체계 수립
- 기후와 안보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엔 체제 내 노력을 주도할 고위급 대표 임명
- 귀환이 허용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거나, 법률상 가능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의 일시적 또는 인도적 보호 방안 수립 및 실행
- 인권에 기반하여 이동, 인도적 체류허가, 보완적/일시적 보호에 관한 지역 및 국제 정책 조화
- 재해 위험 경감, 관리 계획, 긴급 대응 방안 마련 및 실행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
-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업에 재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의 장기적 피해 경감

바. 지속적 평화

- 무력 분쟁과 인권 침해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접근보장 등을 통해 굿 거버넌스, 법치, 민주주의, 책임을 묻는 제도 강화
- IOM 이주 위기 자원 조달 메커니즘(IOM Migration Emergency Funding Mechanism)과 같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빠르게 재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지원
- 공동 분석 및 계획을 통해 인도적 지원 활동가와 개발 행위자 간 협력 증진. 그 방법 중 하나로 인도주의적 긴급 지원에서 장기적 대응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수의 공여기관을 두는 접근법과 다년간 자원 조달이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분쟁 방지 노력에 투자하도록 평화유지 지출을 수정하고 분쟁 방지 노력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강화
- 무력 단체에 관련 국제법을 알리는 것을 지원하는 등 법률체계, 특히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에 관한 훈련 제공
- 중재 역량, 조정, 평화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 중앙, 국가, 국제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교육 제공
- 양자 및 다자 평화 협정을 통해 이주자의 보호 증진. 평화 협정에 대한 이주자, 특히 여성 및 청년 이주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
- 분쟁 피해 국가 및 지역,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 내 여성 조정자의 역할 강화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 호 실행을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 수립

- 위협과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작전을 수행하고, 사후 안정화를 지원하는 등 더 나은 위기 관리를 위해 국가 위기 센터 설립
- 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잘 예측하기 위한 툴킷 개발. 이는 국가, 지방 차원의 조기경보능력 강화를 포함함.
- 위기를 겪고있는 국가로부터 피신하는 사람들의 안전하고, 정규적인 이주 경로를 확장하기 위해 인도적 체류허가 정책 수립을 적절히 고려
- *위기 상황 국가의 이주자 이니셔티브(Migrants in Countries in Crisis Initiative, MICIC Initiative)의 분쟁 또는 자연 재해 상황의 국가 내 이주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to Protect Migrants in Countries Experiencing Conflict or Natural Disaster)* 이행 촉진
- 보고 및 감독 체계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분쟁 방지 역할 강화

사. 데이터

- 포괄적 데이터 수집, 항목화 및 분석을 위한 국가 기관 역량 강화
- 이주 경향과 기후변화 등 기타 이주 원인과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의 질 향상. 이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가구 단위로 설정하고 질적 데이터와 양적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정확한 국가별 이주 현황 작성
- 이주 경로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 데이터 수집
- 더욱 원활한 협력 및 데이터의 호환성을 위해 국내 기관 및 국가 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통일

제 3 주제) 국경관리 (입국·경유·귀환·재입국), 통합과 재통합 등 이주에 대한 국제협력과 거버넌스 (6/19~20, 제네바)

- 총 110 개 국가 대표, 6 개 유엔 기구, 17 개 비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패널 협의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 참가:
 - 이주 전 측면에 대한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이주는 그 특성상 “다주권적” (multi-sovereign) 사안이나 현재 국제적으로 이주에 관한 포괄적 접근 부재함. 본 글로벌 협약은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제도화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함을 확인.
 - 경유, 입국, 국경에 관한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인권 기반 접근의 우선순위 사안으로 가족의 분리, 행정적 구금, 강제 귀환을 언급되었으며 국내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을 평가할 것을 권고.
 - 귀환, 재입국, 통합 및 재통합에 관한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정책 시행은 우선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나 국제기구, 시민사회 단체, 사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함.
- 관련 사안: 전반적 체계와 원칙, 국내 이주 정책의 일관성,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메커니즘의 활용. 이주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 마련, 이주 거버넌스와 인권, 국경 관리, 구금, 영사 보호·지원·협력, 귀환 및 재입국, 통합 및 재통합, 특정한 필요 및 취약성, 데이터 등

논의 사항 및 정책 제언:

가. 전반적 체계 및 원칙

- 모든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조건 등 이주 정책에 대해 주권을 가짐을 재확인
- 국가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자국민을 입국시킬 의무가 있음을 강조
- 국제인권법과 강제송환 금지법칙 등 국제법과 집단추방 금지, 효과적 구제를 받을 권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귀환과 재입국 보장
- 국가와 지역관계자 간 대화를 정기적이고 진전되도록 하여, 이주에 대해 정부 및 사회 전체로의 접근법을 촉진
- 이주정책에 있어 국가차원에서 포괄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 유지 및 향상

나. 국가차원 이주정책의 일관성

- 이주 정책과 타 주요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각 부처 정책에 대한 국내적 현황 파악
- 이주의 경제적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주 원인을 현실적으로 다루는 방법으로 이주와 개발 정책을 연결
- 이주 사안을 국가 및 지역 개발 계획에 통합
- 이주 정책과 다른 국가정책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

다. 이주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기존 체계의 역할

- 지역협의절차(RCP)와 같은 지역 및 소지역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권장하며 그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
- 글로벌컴팩트 이후의 과정에서 이주 및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려

- 비공식적으로 모범사례를 토의하기 위해 이주 및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을 별도의 자치적 비공식체제로 유지
- 국제 이주에 관한 유엔 체제의 협력과 일관성 강화. 특히 각 유엔 기구의 비교 우위를 고려하는 동시에 IOM의 유엔 체제 진입, 이주 관련 사안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고려
- 유엔 내에서, 특히 글로벌컴팩트 이행에 관한 IOM의 역할 강조. 유엔 사무국 내 관련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일관성 촉진
- IOM 이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Migration Governance Framework: MiGoF) 및 이주 거버넌스 지수(Migration Governance Index: MGI)를 사용하여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이주 관련 목표, 특히 세부목표 10.7의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라. 이주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자원 조달

- 서덜랜드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이주를 위한 자금 조달 기금 마련
- 포괄적 글로벌 연구를 통해 국가 간 이주 거버넌스의 격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자금 제공
-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 자금조달체제 및 프로그램 간 협조와 상호보완성 개선
-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국과 협력하여 재정적 지원 제공
- 정부 관리 및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 이주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해 양자간 또는 지역별 협약 체결
- 체계적·규칙적 평가주기를 포함함으로써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시행이 역량강화활동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리고, 새로운 교훈 및 개선해야 할 부분 파악

마. 이주 거버넌스에서의 인권

- 건강, 교육, 가족 재결합과 법적 권리에 대한 접근성 등 여러 이주 고려사항을 국가인권정책 및 프로그램에 포함
- 이주자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개발한 <2035 인간 유동성 의제(2035 Agenda for Human Mobility)> 관련 부분을 글로벌컴팩트에 통합 고려
- 국가인권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주자의 접근성 보장
- 안내전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를 이주자에게 제공
- 모든 단계에서의 이주과정, 특히 취약성이 증폭되는 곳에서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포함
- 여성 이주자와 이주자 공동체 내 여성이 변화를 주도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단순한 피해자 또는 취약계층으로 인식하지 않음
-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국제 이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관련해 뉴욕 선언이 명시하는 바를 이행
- 보호 필요에 따라 정당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경에서 보호 관점에 입각한 입국체제 구축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양자간 대화에서 이주 사안을 포함시키고, 국가차원에서의 이행을 위해 <난민보호 및 혼합이주에 관한 10 가지 행동계획> 참고

바. 국경관리

- 효과적 국경관리와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기적인 이주를 위한 정책을 주권의 책임있는 이행으로 개념화
- 국경관리자들이 보호 필요를 식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표준절차를 수립
- 고용, 자격 인정, 정보 제공 프로그램, 그리고 가능한 경우 표준 생체인식 기준과 고급 정보에 대한 정보 교류를 촉진

- 보호 필요의 관점에 입각한 국경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국제 국경에서의 인권에 대한 권고원칙과 지침”을 활용
- 출국 전, 입국 후, 귀환 전, 귀환 후 이주 주기 전반에 걸친 정보공유를 위해 통합적 국경 관리 체계를 위한 투자 장려
- 문서 위조 식별 등 국경 관리에 있어 정보 수집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공무원을 위한 트레이닝을 개선하며,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

사. 구금

- 비범죄화 원칙을 이주 거버넌스의 토대로 설립
-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구금에 대한 대안책 장려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자신과 부모의 체류자격으로 인한 아동의 구금을 철폐할 수 있도록 글로벌컴팩트에 로드맵을 포함
- ‘유엔 표준 수감자 처우 최소 규칙’ 및 기타 모든 관련 국제표준에 준수함으로써 구금 환경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보장
- 구금을 국경관리와 비정규적 출입국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이주자의 자유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법적 자유 박탈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권고 준수
- 구금 중인 이주자가 조건 없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임의적·불법적 구금에 대한 책무성과 효과적 구제 보장

아. 영사보호, 지원 및 협력

- 서덜랜드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사 지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각종 문서, 출국 전 지원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이주자 접근을 보장하여 귀환 이주자를 위한 영사 서비스 보장
- 모든 이주자가 여행 관련 문서 등 각종 영사 관련 서류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주자들에게 특히 목적국과 경유국에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끔 영사관리자 역량 향상
- 실종된 이주자, 보호자가 없는 이주 아동, 젠더에 따른 취약성, 장애가 있는 이주자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사 역량 향상
- 적법 절차 이행을 위해 모든 이주자에게 영사 지원에 대한 접근권 보장

자. 귀환과 재입국

- 통합적 정책을 개발하고, 이주 과정에 귀환과 재입국허가를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하여 양자간 및 지역적 협약을 체결하며, 개발 고려사항에 따라 자발적 귀환 촉진
- 귀환하는 국민들을 절차에 따라 수락하고, 귀환의 편리화를 위해 주민등록부에 생체인식식별을 추가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식별 방식을 기반으로 신속히 자국민의 신원을 확인하고, 여행증명서를 발행함으로써 국제적 의무 존중
- 귀환과 재입국에 관해 공유된 관행 및 표준을 정의하여, 출생국과 목적국이 자발적으로 국제표준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귀환 이주자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범정부적 정책, 프로그램 또는 사무소 설립
- 강제송환 금지원칙의 권리와 인권기반 귀환이 보장되도록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별평가 허용

- 이주자의 귀환과 재입국 전담기관에 자금지원 고려

차. 통합과 재통합

- 이주자들이 그들만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자 권리보유자로 인식되고 대우받도록 보장하고, 인종차별, 성차별, 외국인 혐오증 등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차별유형에서 벗어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주의 이익과 출생국 및 목적국 내 이주자 기여에 대하여 대중에게 정보 제공
- IOM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AVRR)과 같은 프로그램 지지 및 강화
- 범사회적 통합 및 재통합 프로그램 개발에 이주 공동체, 디아스포라 기관, 지방 정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참여
- 시민단체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과 혁신적 접근법을 통해 재통합 프로젝트 장려
- 이주자들의 기업가정신, 기술과 인적 자본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귀환 이주자 재통합을 위해 금융문맹퇴치 프로그램의 잠재력 자세히 조사
- 출국 전 정보, 언어 훈련, 기술 일치 및 교육 접근권 제공
- 귀환한 이주자들에게 취업기회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습득된 기술을 활용한 접근성 강조
- 정기적으로 증거에 기반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 및 재통합 정책에 대한 평가 실시

카. 구체적 필요와 취약성

- 취약성 확인을 위해 생체인식식별기와 신원 확인문서에 대한 접근성 장려
- 취약성이 이주자의 유형에 따라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와 일련의 상황에 따라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 구분
- 기존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정책이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이주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주정책 촉진
- 특수 의료서비스 및 이주관리의 특정 프로토콜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가장 취약상태의 이주자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법 고려
- 글로벌 이주 그룹(Global Migration Group)이 개발한 '취약상태 이주자 보호 관련 지침' 이행

타. 데이터

- 정부가 이주 데이터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독려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계획을 공유하고, 더 나은 항목별 분리를 통해 실종사례를 줄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향상
- 가구조사, 인구조사문서 및 국가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에 이주 데이터 통합
- 국가들이 서로 증거를 공유하여, 미래의 행동방향에 대한 공동 분석 및 자료 권장

제 4 주제) 송금, 소득이동 등 이주자와 디아스포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7/24~25, 뉴욕)

- 총 120 개 국가 대표, 10 개 유엔 기구, 10 개 비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패널 협의로 나뉘어 진행됨
 - 이주와 개발의 연관성: 개발에 대한 이주자의 기여를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의 필요성 확인. 이주를 국가 개발 계획 뿐만 아니라 다자 개발 협력에도 주류화 해야 함.
 - 이주자의 기여를 촉진하는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회, 이주 원인 및 개발의 도전 과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또한 출신국 및 목적국 정부, 이주자 단체, 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 이주자의 기여를 촉진하는 주요 요소로 의료 지원, 맞춤형 개발 사업, 출신국에서의 노동 시장 재통합 등이 언급됨.
 - 이주자 해외 송금, 취득한 이익의 유동성: 기술 등을 활용해 이주자 해외 송금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정책 사례 공유. 송금을 받는 주체의 금융·재정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
- 관련 사안: 전반적 체계와 원칙, 이주와 개발의 통합 및 정책 일관성의 추구, 이주 주기에 따른 개발 잠재성, 디아스포라 기여촉진, 사회통합, 이주자 해외송금 및 금융·재정 통합, 사회적 송금, 취득이익의 유동성, 데이터 등.

논의 사항 및 정책 제언:

가. 전반적 체계 및 원칙

- 개발협력, 금융협력,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 협력에 대한 양자간 및 다자간 협약을 통해 국가 간 협력 촉진
- 여성 및 소녀의 권한 강화와 관련기관에 중점을 두면서, 이주자와 디아스포라를 개발의 주체로 인지.
- 이주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주자의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보호의무를 전제조건으로서 이행
- 이주 사안, 특히 글로벌컴팩트의 후속조치를 취하는 데에 있어 국제이주기구(IOM)의 중요한 역할 인지
- 이주관련 목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전체적으로 달성하도록 강조
- 글로벌컴팩트에서 이주와 개발에 대한 즉각적, 중·장기적 접근법 결합
- 기존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적·소지역적 발판을 인정하여 모범사례 확인 및 적용

나. 정책 일관성 촉진과 이주와 개발의 통합

- 모든 단계의 정책 계획에 이주사안을 주류화하여 일관성을 보장
- 이주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도록 일관된 지역개발 계획 장려
- 해외거주 이주자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조정 촉진
- 개발계획에 이주사안을 효과적으로 설립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의 관계자 협력 증진 및 역량강화
- 국가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이주 투자를 촉진, 활용 및 모니터링
- 국가적·국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을 격려함으로써 출신국과 목적국의 국가개발전략에 참여하도록 유도

다. 이주 주기에 따른 개발 잠재력

- 두뇌 유출 및 전문가 출국현상을 보상하기 위해 국내 훈련 및 교육 확대

- 이주 노동자를 위한 고용 기회, 기술 개발 및 금융저축기회를 제공하면서 노동시장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영구적·계절적·임시적 및 순환적 근로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노동이동성 계획' 마련
- 복수 입국비자와 같은 사안을 제안함으로써 순환 이주의 잠재력 육성, 평가 및 모니터링
- 기업가와 투자자가 국가에서 일하고 거주하면서 혁신적인 벤처를 수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비자 제도 수립
- 비정규적 체류 상황 방지와 투자,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을 위해 여러 종류의 비자 간 체류자격의 변화를 가능하게 함
- 수요중심의 이주정책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노력을 결합함으로써 소셜 덤핑(social dumping)을 방지하고, 입국 또는 거주허가를 잃지 않고 국가 안팎을 이동할 수 있게 보장
- 2 개국 이상의 당사국들이 이해관계자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모든 참여국 노동시장에 참가자들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출신국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의 규모를 키움
- 노동기술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멀티이해관계자 발판 구축
- 자격 인정, 근로자 인증,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송금 극대화에 관한 특정 양자간 프로그램 개발
- 국가 이주 매뉴얼을 통해 불규칙적 이주경로에 대해 위험인식을 높이고 정기적 이주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주택마련' 또는 '토지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해외 이주자들에게 본국에서 집을 짓거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
- 귀환하고자 하는 해외 거주 국민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며, 대출을 통해 기업가 역량강화 지원
- 관련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귀환이 잘 준비되도록 보장하고 취업 지원 및 기업가 정신 지원 등을 통해 귀환에 따른 재통합 및 모니터링 잘 이루어 지도록 보장
- 서덜랜드 보고서에 따라 채널기금 및 기술 지원으로 이주 기금 마련
- 세계은행의 '난민을 위한 글로벌 양허성 자금'이 혁신적인 금융체제로서 준 교훈을 얻고, 이주 공동체를 위해 자원의 유용성 분석

라. 디아스포라 기여 활성화

- 전담 정부관청과 핵심 부서의 설립을 통해 디아스포라가 출신국의 사람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또는 전담 사무실 설립
- 디아스포라가 출신국의 개발에 하는 기여와 관련해 주요 논의자가 되어 정부와 협업할 수 있도록 디아스포라 자문위원회를 설립
- 출신국과 목적국에서의 구조적 네트워크를 촉진함으로써 통합, 기술 이전 및 의사 소통의 목적으로 디아스포라 활용
- 이주자 및 디아스포라의 기술을 동원하여 출신국과의 기술 및 지식 공유를 통한 기여를 촉진하고 정책 실행에 이들을 참여시킴
- 지식 이전과 출신국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되고 재능있는 디아스포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상호연결된 네트워크 구축
- 디아스포라와 출신국 간의 연합을 더욱 향상시키고, 보다 조율된 접근방식을 통해 사회·경제적 진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에 사회문제 또는 지역사회 담당관을 배정
-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분쟁 민감성, 결과기반 관리 및 “해를 주지 않는다(Do no harm)”는 원칙을 강화하는 등 참여적 접근법을 통해 디아스포라와 협력
- 전쟁 후 상황에서의 평화과정, 사회·경제 및 정치 개혁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공헌 인정

- 정부가 비정부기구를 지원하여 디아스포라 회원들이 출신국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 이전을 위한 방안모색
-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핵심기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목표분야 개발지향 프로젝트 지원
- 일정기간 동안 출신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아스포라의 일원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수립
- 무역 규정 및 절차에 관한 무역 박람회를 조직하고, 중소기업 트레이닝 툴을 제공하며, 이주자가 본국의 상품을 구입하는 시장의 가치를 강조하는 등 사업을 창출하고 무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디아스포라에 대한 지원 개선
- 해외거주자를 위해 선거인명부 제공
- 이주자가 출신국 내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가족 및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촉진

마. 통합과 포용

- 글로벌컴팩트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포용 관련 지침 개발 및 촉진
- 노동시장, 사회복지 서비스, 주거 및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 설립
- 영사 보호를 통해 이주자에게 서비스와 지원 제공, 해외 거주자 등록을 정기적으로 갱신
- 새로운 이주자를 위해 출국 전부터 도착 단계까지 언어 및 문화 훈련 제공
- 이주자들의 권리를 고취하고 보호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존에 소유했었던 기술과 새로 취득한 기술을 인식함으로써 이주자 권한 강화
-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체류 이주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자가 특정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접근권 보장
- 자발적인 의료 보험 프로그램 수립하여 이주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보장
- 이주자가 출신국과 목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주자를 의료 및 교육 시스템에 통합시키고, 이주자 체류 자격의 정규화를 통합 촉진 및 경제적 기여 향상의 수단으로 고려
-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성 허용을 위해 영사기관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등 해외 체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양국간 또는 지역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바. 이주자 해외 송금과 경제적 통합

- 경제적 통합과 합리적 비용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간 효율적 협력 강화
- 이주자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가적·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의 참여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개선
- '재정적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Financial Inclusion)'의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 포용을 위한 고위급 원칙(High-Level Principles for Digital Financial Inclusion)'을 홍보하여 금융적 포용과 금융 이해력 증진
- 온라인 정보 포털 구축,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송금 비용, 속도 및 기타 매개 변수의 비교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송자가 가장 저렴한 송금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함
- 출신국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행위자간 파트너십 촉진
- 이주자가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정기적인 채널을 통해 송금하며, 재정 지식을 향상시키고, 대출을 받아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영사 지원 강화
- 예금 제도 등 이주자를 위한 은행 계좌 접근성 강화와 맞춤형 솔루션 확대

- 아프리카 이주자 해외송금 연구소(African Institute for Remittances) 등 지역적 이주자 해외송금 연구소의 역할과 주요 목표를 강조하여 아프리카의 국가가 이주자 해외 송금을 빈곤 퇴치를 위해 활용하는 구체적 정책을 실행할 역량을 강화
- 국가적 이주자 해외 송금 계획 개발
- 'Three for One' 프로그램처럼 현지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공공 사업 및 인프라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국가적 이주자 해외 송금 매칭 프로그램을 도입
- 모바일 서비스, 디지털 결제 시장 및 인터넷뱅킹과 같은 기술사용을 통해 이주자 해외 송금 서비스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 경쟁 강화
- 올바른 규제 메커니즘과 글로벌컴팩트를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이주자 해외 송금 시장 규제
- 우편 사업자뿐만 아니라 민간 은행 부문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이주자 해외 송금 수수료를 낮게 유지
- 귀환한 이주자에게 금융적 포용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색
-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시의 이주자 해외 송금 경로를 수립하여 위기상황에서의 필요를 지원하고 송금의 영향을 파악

사. 사회적 송금

- 디아스포라의 기술과 지식을 농촌지역 등 출신국 내부로 이전하기 위해 양자 협력 프로젝트 개발
- 세계 은행,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이주기구(IOM)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송금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구축
- 출신국 및 목적국 내 공동체의 개발을 촉진하는 사회적 송금의 젠더적 측면을 인식
- '가족을 위한 이주자 해외 송금의 날(International Day of Family Remittances)'을 홍보하여 이해 관계자 간 파트너십 강화의 기회로 활용의 기회로 촉진

아. 취득한 이익의 이동성

- 취득한 이익과 생활보조금의 이동성을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 협약 도입
- 생활보조금의 이동성 및 장애해택 요청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지원 체제 제공
- 기존 기관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여 초국가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의 이동성 관리
- 사회적 보호, 취득한 이익의 이동성, 이중수혜 방지조치 및 행정적 보조에 있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양자간 및 다자간 협약을 위한 국제원칙 개발
- 취득한 이익의 이동성으로 개발 도상국 역량강화
-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 협정에 이동성 및 사회보장 협약 포함

자. 데이터

- 이주 데이터 수집을 향상하고, 정규 및 비정규 이주가 개발에 주는 영향 분석
-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계획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긍정적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사용
- 이주자 해외 송금 수수료의 평균을 알기위한 영향력 평가 등 이주자 해외 송금과 관련한 항목별로 구별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 출생국 및 이주 이유 등 인구주택총조사 내 이주와 관련된 표준화된 질문을 개발
- 젠더에 따른 기술 활용도 등 이주자 해외 송금에 있어 젠더 항목별로 분류된 데이터 검토

제 5 주제) 이주자 밀입국,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 보호 및 지원 (9/4~5, 비엔나)

- 총 110 개 국가대표, 8 개 유엔 기구, 11 개 비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패널 협의로 나뉘어 진행
 - 이주자 밀입국: 이주자를 범죄화하는 법률 등은 이주자의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이주자 밀입국은 대규모 범죄 조직에 의해 자행되기 보다는 가족, 지인 등의 관계와 필요에 의해 나타나는 추세. 이주자 밀입국과 인신매매 사이에 이론적 차이는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이슈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임.
 -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 이주자들은 그들의 체류자격, 부족한 통합 수준, 밀입국 경험 등으로 인해 인신매매에 더욱 취약함. 상대적으로 적은 인신매매 혐의 기소와 유죄판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팔레르모의정서는 그 비준 뿐 아니라 효과적 이행이 중요함.
 - 이주자와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식별, 보호 및 지원: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많지만 이는 우선 엄격한 사실 기반 분석을 선행해야 효과적임. 일부는 국민과 이주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이주의 정규적 경로 보장, 출입국과 인신매매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조화, 피해자 식별 및 지원을 위한 표준 운용 절차 등을 제안함. 또한 세션 참가자들은 인신매매와 이주자 밀입국 알선에 대해 사법 집행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이에 형사사법제도와 인권에 기반한 대응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이주자의 필요와 국가 안보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함.
- 관련 사안: 전반적 체계와 원칙, 식별, 보호, 지원 및 취약성, 예방 및 인식 개선, 범죄 네트워크 와해와 기소, 역량강화, 협력 및 파트너십, 데이터 등

논의 사항 및 정책 제언:

가. 전반적 체계와 원칙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그 협약을 보충하는 두 의정서에 가입 및 비준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 이행을 위한 조치 마련
- 향후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 되도록 세션 이슈 브리프에 나온 이주자 밀입국 알선과 인신매매의 분류를 유지
- 이주라는 다차원적인 현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주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두 범죄(이주자 밀입국 알선과 인신매매)의 분류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이주의 안보 측면이나 이주자의 불법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주는 다차원적인 현상이며 이주자 밀입국을 포함하는 비정규적 이주가 사법 집행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으로서는 효과적으로 대응 및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
- 취약성을 만들고 증폭시키거나, 의도치 않게 이주자 밀입국 알선과 인신매매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국내 정책 검토
- 정책 계획 및 사법 기소에 사용되는 인신매매 및 이주자 밀입국 알선의 정의와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의 정의가 일관적일 수 있도록 함
- 알선자를 통하여 밀입국했거나 인신매매를 당했던 이주자를 범죄화하지 않고 직, 간접적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에 집중

- 모든 차원에서 인신매매와 이주자 밀입국 알선에 대해 통합적, 다분야적 접근
- 인신매매 및 이주자 밀입국 경우에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적용
- ILO의 관련 노동 협약을 비준, 이행하고 양질의 일자리의 기준을 홍보
- 핵심 안내서로 “인신매매 철폐 글로벌 행동 계획(Global Plan of Action on Trafficking in Persons)”
참고

나. 식별

- 국경에서의 개선된 스크리닝 등을 포함하는 국가적, 국제적 연계(referral) 메커니즘 수립. 이는 분명한 절차와 초기대응자의 명확한 역할과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밀입국 이주자를 식별하는 모든 관련 기관, 당국 및 행위자를 포함하며, 아동에 대한 특별한 연계 메커니즘을 포함함.
- 인신매매 피해자와 취약한 상황에 놓인 밀입국 이주자 조기 식별 촉진
-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 도착하는 지점에서 잘 훈련된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최신의 스크리닝 제공
- 난민 지위 인정 신청 센터에 인신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제적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 중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보편적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수립
- 식별을 위해 ICT 등 혁신적 기술 활용
- 노동 착취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고용업체, 근로감독단, 고용주의 참여
- 인신매매 피해자 및 이주자를 학대하는 이주자 밀입국 알선자 식별을 위해 이주 경로에 대한 효과적 스크리닝 강화

다. 식별, 보호, 지원 및 취약성

- 여성, 아동(특히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떨어진 아동) 등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개발, 적절한 사례관리를 소개, 관련 부처에 전문적인 담당자를 고용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를 방지
- 인권을 보호하고, 포용을 증진하고 지역당국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이주 자격 정규화 및 (출입국 관리와 일반 서비스 제공 간) 방화벽 역할을 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범죄자 식별 및 기소
- 사법기관 공무원을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을 위해 전 분야에 걸쳐 특화된 트레이닝 등 인신매매나 밀입국 알선과 관련된 다른 모든 형태의 착취의 피해자에 대한 식별, 지원 및 자문 제공을 촉진
- 무국적 상태나 다른 취약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이주자에 대해 출생등록과 영사서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주의 비정규성 자체가 취약성의 한 형태임을 인정
- 인신매매와 이주자 밀입국 알선과 관련한 폭력, 착취, 학대의 아동 피해자를 더욱 잘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 아동 보호관 사이의 체계적 협력 증진
-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고, 그러한 아동이 아동친화적 정보를 제공받고, 법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안적 양육 및 후견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
-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것과 기소과정에서 추가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귀환 등 피해자의 안전한 귀환과 관련한 효과적 방안 고려
- 양자 및 지역협력 등을 통해 밀입국한 비정규 이주자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

- 이주자 밀입국은 인도적 보호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주자 밀입국의 복잡한 역학을 고려한 정책 대응 고려. 강제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규적 이주 경로가 없을 시 특히 그러함.
- 위험에 처한 이주자 식별과 대응 방안 마련에 있어 기관과 여성 및 아동의 의사를 적절히 고려
- 뉴욕 선언의 구상에 따라 비정규 이주자, 특히 소년, 소녀와 청소년이 가지는 취약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진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다시 강조
- 이주 경로에 따라 쉼터, 음식, 전화통화, 권리에 대한 정보, 난민 신청 절차, 아동에 대한 지원과 젠더에 따른 지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설립
- 공동의 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해상의 이주자에게 지원 제공
-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등을 포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용, 체류 허가, 가족 재통합에 대한 일관적 기준 마련 장려
- 취약한 상황에 놓인 밀입국 이주자를 위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체류 허가 와 인도적 사증 제공
-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보상을 위한 자원 분배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증진을 위해 옴부즈퍼슨직과 자문위원회 설치

라. 예방 및 인식 개선

- 착취를 통해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관리하여 인신매매 예방
- 노동착취 및 인신매매 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이주자에게 법적 하의 동일한 사법 및 보호에 대한 접근 보장
- 특히 반숙련, 저숙련 이주자와 착취에 기반한 분야에 대해 정규적 노동이주의 기회를 증진하여 수요를 관리하고 이주자 밀입국 알선과 인신매매 방지
- 소셜덤핑, 부채로 인한 숙박, 비윤리적 고용, 착취에 반하는 안전장치를 세우고 이주 노동자, 특히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
- 이주자에게 밀입국 알선자를 통한 비정규적 이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지역당국, 영사당국, 사기업, 학계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 차원에서 여러 언어로 정보 홍보 캠페인과 인식개선 캠페인 조직. 이는 출국 전(前) 단계를 포함함.
- 이주자 밀입국 알선과 인신매매이 위험하다는 예시를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개발
- 인신매매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법정의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 아동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보호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 증진
-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이주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 더욱 강력한 국내 법률, 기관 및 프로그램을 요구
- 부정부패가 인신매매와 이주자 밀입국 알선을 부추기는 핵심 요소임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반(反) 부정부패 방안 실행
- 출신국 내 생계활동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과 직업적 교류에 관한 양자 및 지역적 협약 체결
- 무력 분쟁에 관련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반(反) 인신매매, 반(反) 이주자 밀입국 알선 방안 포함
- 반(反) 인신매매 방안으로 성매매를 규제하는 정책 검토
- 사기업과 함께 노동착취를 위한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와 공급망 내 착취의 원인 대응
-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인력 업체의 규제, 등록 및 모니터링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치

- 착취가 일어나기 쉬운 분야의 고용업체에 대한 무작위 감사 제도 도입
- 의심스러운 사증 신청을 알아볼 수 있게 대사관과 영사관에 관련 안내와 프로토콜을 제공
- 반(反) 이주자 밀입국 알선 법률을 통해 이주자 인권 보호 활동가에 대한 비 범죄화 보장

마. 범죄네트워크 와해와 기소

-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범죄화에 맞서기 위해 원활한 피해자 보호 메커니즘 및 안전 장치를 수립하여 증인 협력 증진
- 밀입국 알선자, 인신매매자, 이주자를 착취하는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공유를 체계화
- 인신매매와 이주자 밀입국 알선 사건 기소 및 처벌을 위한 별도의 사법기관을 두고 경찰 내 전담과를 설치
- 범죄자 기소에 훈련, 정보, 피해자 보호를 추가하는 여러 분야에 걸친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범죄 기소에 대한 기관 간 협력 개선
-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사법 시스템, 노동 시장, 의료서비스 및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접근 제공
- 국경 간 금융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인신매매 관련 불법적 금융 흐름을 막고 국내 및 초국적 범죄 네트워크 와해
- 모텔 예약, 약국에서의 큰 규모의 지출, 야간에 ATM 을 통한 잦은 예금과 같은 지표에 기반하여 금전의 흐름을 추적하고, 인신매매자를 식별하고 수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거래 분석 센터, 금융 기관, 사법 집행 기관, 인터폴 간 파트너십 증진
- 경찰 내 전담과로 바로 연결되고 해당 분야 전문 검사와 연결되는 국가적 핫라인 설치
- 효과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즉각적 지원을 제공하고 범죄활동을 중단시키도록 관련 훈련을 제공받은 국경검문소 설치
- 이주자 밀입국 알선자에 대한 적절한 기소와 처벌을 위해 법률 체계 검토
- 공급망 투명성, 강제 구걸, 장기 적출을 포함하여 성 착취, 노동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특별 조항을 포함하는 인신매매 법률을 제정
- 그 심각성이 반인류 범죄의 수준에 미치는 사건들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질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최악의 형태의 인신매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

바. 역량강화, 협력 및 파트너십

- 입국시 모든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그들의 연령에 적합하고, 젠더를 고려한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증진
- 밀입국 알선, 인신매매 및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 보편적 인권기반 트레이닝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 협력활용
-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기관 간 조정 그룹(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등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해 전 세계적인, 연합을 이룬 접근
- Alliance 8.7 을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맞춰 타임라인을 앞당기고, 연구, 지식 공유, 혁신 장려, 자원 마련 및 활용을 하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플랫폼으로 인정
- 착취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 유엔 인신매매철폐 글로벌 행동계획(United Nations Global Plan of Action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그 진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개발
- 터키 이스탄불에서 7 월 5 일~6 일 열린 전문가 워크숍 “이주자 밀입국 대응 지역 회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이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Regional Conference on Counter Migrant Smuggling: Innovative Ideas and Supporting New Models of Cooperation)”의 결과를 고려

-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주자와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를 식별하고 능률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사 역량 강화
-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주 경로에 따라 국제 트레이닝 센터 또는 리에종(대외협력) 네트워크 등 정보 공유 메커니즘 수립
- 입국 지점에서 적극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스크리닝 절차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 협력을 활용하고 적절한 경우 양자, 지역 차원에서 우수 사례 차용
- 인신매매 피해자와 착취당하는 이주자에 대한 식별 및 지원을 위해 시민사회, 학계, 사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기업과 연계. 이는 윤리적 이주 노동자 고용, 공급망 투명성, 혁신적 기업행동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 피해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 메커니즘 수립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최근 업데이트 된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보호와 혼합 이주: 10 개항 행동 계획 이행 고려
- 국경경찰, 해양경찰, 기타 초기 대응자, 사법 공무원, 검사 등 개발도상국의 관련 기관과 당국의 역량강화와 훈련 지원
- 국경 간 정보 공유와 분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지원 요청

사. 데이터

- 이주자 밀입국 알선과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형성에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공동 대응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의 기존의 항목별 데이터 수집과 공유를 강화
- 당사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개인정보는 구체적 목적을 위해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수집 및 저장에 있어 높은 수준의 보호 제공
- 인권에 기반하고, 아동 및 젠더를 고려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피해자 보호
-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이주자가 밀입국 알선자를 이용하게 만드는 원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인신매매 데이터 공유를 위한 IOM 의 플랫폼인 카운터 트래피킹 데이터 콜라보레이티브 (Counter Trafficking Data Collaborative)를 지원
- 이주자 밀입국 알선자 및 인신매매자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경향을 분석하고 그러한 정보를 적합한 사법 집행 기관과 정보 기관과 공유
- 이주자 밀입국 알선 및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관련한 금융 흐름에 대한 연구 장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